

공 개



의안번호	제 201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1. 15. (제 20 차)

의
결
사
항

지스마트글로벌(주)의 감사인 정진세림회계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11. 15.

1. 의결주문

정진세림회계법인(이하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정진세림회계법인이 지스마트글로벌(주)의 제19기('18.1.1.~'18.12.31.)부터 제20기 3분기('19.1.1.~'19.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조사·감리결과 조치('22.7.13. 제13차 의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함에 따라 그 당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원조치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4. 참고사항

가. 이의신청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조치(붙임1)

나. 관련 법규(붙임2)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 지>

증권선물위원회

결 정

이의신청인 정진세립회계법인
[OO 000 000 000 0000 00]

원 결 정 2022.7.13.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징금(142.5백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
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40점

주 문 이의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증권선물위원회가 2022.7.13.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지스마트
글로벌(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를 취소하라.

이 유

1. 원조치 부과사유

가.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8년 5,594백만원)

나. 현금흐름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8년 16,208백만원)

다. 매체사용료 연대의무 관련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8년 2,500백만원)

라. 광고사업권 이전 관련 리스계약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8년
10,664백만원)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광고사업권 회수가능액 4,199백만원 산정 관련) 광고사업권 회수가능액 4,199백만원은 금융감독원 감리담당 실무자가 회사 및 □□□□□□□을 강압*하여 제출받은 자의적인 평가액에 불과하므로 객관성이 결여된 금액임

* 금융감독원 감리담당 실무자는 당초에 의도한 평가액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의 최초 1차, 2차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음

(2) (회사가 광고사업권 10구좌 중 7구좌를 (유)○○○○○○○○○○에 임대한 거래 관련) 회사는 '21.12.13. (유)○○○○○○○○○○에 회사가 보유*¹한 광고사업권 10구좌*² 중 '7구좌'를 임대하였는데,

*1 회사는 '17.5월 (주)◇◇◇◇◇◇로부터 광고사업권 무상취득(조건 : 최소 30%이상 공익광고 송출)

*2 1구좌 : 광고 송출시간(18시~24시)을 10개의 시간단위로 구분한 것 중 한 개를 의미

금융감독원은 위 임대계약의 대상물을 '상업용 7구좌'로 해석하였으나, 다수의 자료*를 고려하면 '상업용 4.9구좌(7구좌 중 70%) + 공익용 2.1구좌(7구좌 중 30%)'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회사와 (유)○○○○○○○○○○ 간의 계약 내용, 동 계약을 주도한 ★★★ 전 부사장의 진술 등

(3) (이의신청인에 대한 외부감사법 과징금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의신청인의 위반연도('18회계연도) 감사보수인 95백만원을 과징금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 이의신청인에 대한 외부감사법 과징금 : 142.5백만원(95백만원 × 150%)

감사보수 95백만원은 ①반기검토 보수(28.5백만원) + ②내부 회계검토보수(9.5백만원) + ③기말감사 보수(57백만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기말감사 보수(57백만원)을 과징금의 기준금액으로 산정했어야 함

(4) (회사 과징금 대비 과도한 금액)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액(142.5백만원)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회사 및 그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액(회사 : 증권발행제한 4월, 대표이사 : 27.9백만원, 前 담당임원 : 25백만원) 보다 현저히 높은바,

이의신청인과 회사(경영진 포함) 조치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이유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조치를 유지함이 타당 (이의신청 기각)

(1) (강압 증거 없음) 금감원 감리담당 실무자는 '□□□□ □□의 손상검토보고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동 □□□□으로부터 최초 수령한 보고서는 세 번째 버전 파일로서(최초 1차, 2차 보고서를 수정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 이를 입증하는 관련 이메일(금감원 감리담당 실무자와 지스마트글로벌(주) 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자료를 제출함

이의신청인은 '금감원 감리담당 실무자가 회사 및 □□□□ □□을 강압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 관련 증거는 제시하지 않음

(2) (7구좌의 해석에 대해서는 원조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동 사항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조치 당시의 감리위원회·증권 선물위원회에서의 주장내용과 동일한바,

원조치 의결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이외에 원조치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3) (감사보수 관련 원조치의 기준금액 산정은 타당) 정진세림 회계법인이 '18.4.27. 회사와 체결한 감사계약 공문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액은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과 매출규모 및 감사범위를 고려하여 일금 구천오백만원정 (₩95,000,000)으로 산출”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감사보수가 ①반기검토 보수 + ②내부회계검토 보수 + ③기말감사 보수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증선위는 그 동안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시 감사보수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해왔음

* ●●●●●●(주)■■■■■■■■의 '18년 감사인), ◆◆◆◆◆◆(주)♣♣♣♣의 '18년 감사인) 건 등

(4) (회사의 상장폐지로 인한 효과에 불과) 증선위는 애초에 회사에 대한 과징금액을 501,2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회사의 상장폐지 ('22.2.23.)로 인하여 “증권발행제한 4월” 조치를 하였던 것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회사의 상장폐지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최종 결과(증권발행제한 4월)만을 비교한 것일 뿐이며,

애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과징금을 비교할 경우,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142.5백만원)이 회사에 대한 과징금(501.2백만원) 대비 낮은 금액임

한편,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으나,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함

* (주)♠♠♠♠♠♠('20.4.22. 증선위 의결), (주)●●●●●('21.2.8. 증선위 의결), (주)♣♣♣♣♣♣('22.7.13. 증선위 의결) 등

3. 결론

회사가 보유한 광고사업권 중 7구좌를 (유)○○○○○○○○에 임대한 거래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조치 관련 감리위·중선위 당시 주장내용과 동일하고,

원조치 의결 시 이미 반영되었으며, 이외에 원조치를 변경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도 없음

그 밖에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자 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중선위의 원조치

조치양정 ^{*1}	중과실 ^{*2} (Ⅲ) ^{*3}
조치내용 ^{*4}	<div><div><input type="checkbox"/> 정진세림회계법인(중과실 Ⅲ단계) [’18년 감사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142.5백만원^{*5}○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40점</div><div><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중과실 Ⅲ단계) [’18년 주책임자, 담당이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div><div><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과실 Ⅲ→Ⅳ단계)^{*6} [’18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의</div><div><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중과실 Ⅲ→Ⅳ단계)^{*6} [’18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div></div>

*1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

*2 동기판단

-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 현금흐름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매체사용료 연대의무 관련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광고사업권 이전 관련 리스계약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4 조치근거

-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공인회계사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4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4항

*5 (붙임2) “과징금 산정내역” 참조

- 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19.9.19.)에 ○○○○회계법인이 수행한 회사의 제19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
- 제19기('18.1.1.~'18.12.31.) 감사절차 소홀(위반동기: 중과실)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1호 및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제1항 및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6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1단계 추가 감경[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관 련 법 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① < 생 략 >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생 략 >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 생 략 >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 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의 정의

가. 회사 :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정과 목의 특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나. 회사관계자(「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에 대하여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 부과기준율의 적용 : < 생 략 >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 < 생 략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 제1항 관련)

1. 기준금액

-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 < 생 략 >

3. 기본과징금의 조정 : < 생 략 >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 < 생 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가. 법 제428조제4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생 략>

나.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생 략>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생 략>

마. 법 제429조의3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생 략>

1의2. 삭제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③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292